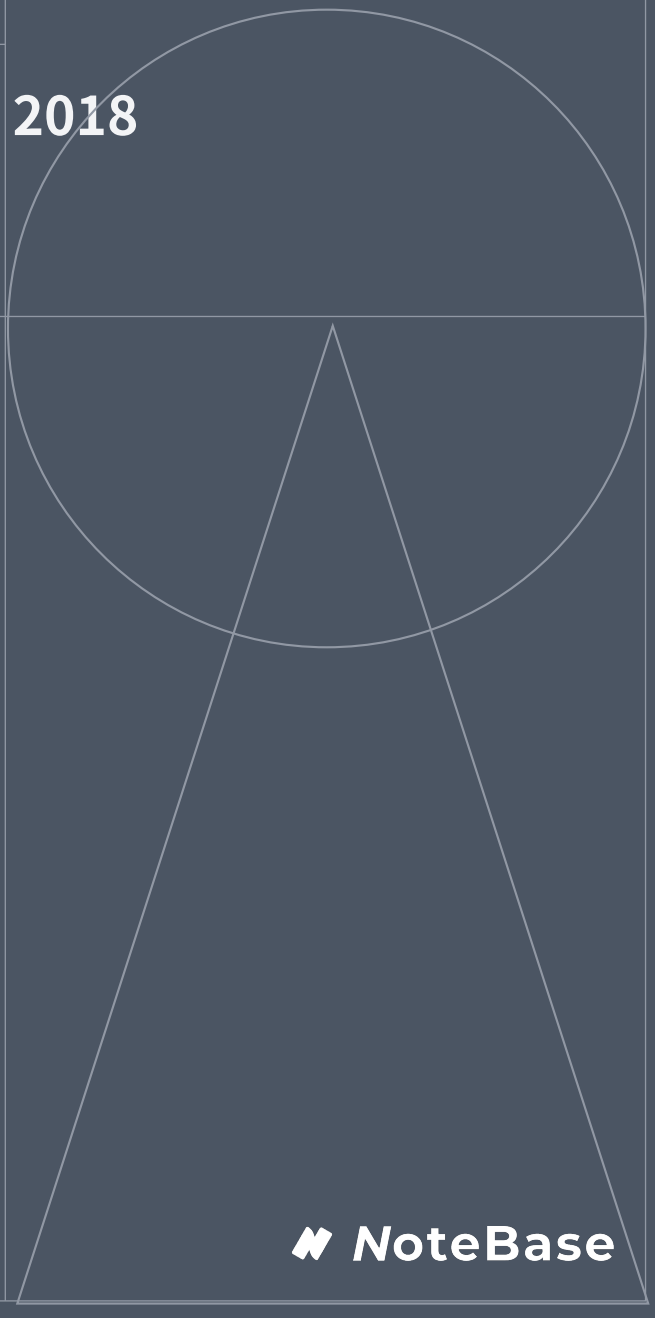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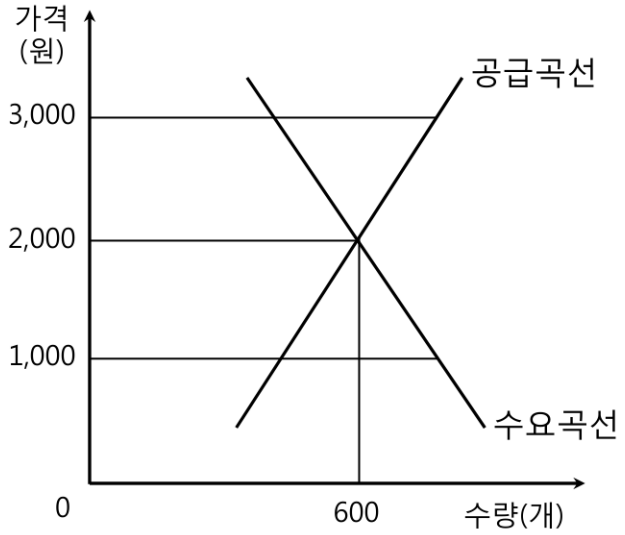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8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8

1. 다음 그래프는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 가격은 2,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600개이다.
② 가격이 3,000원일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해 가격이 하락한다.
③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공급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⑤ 1,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제 정책을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읽고, 수요·공급의 변화와 가격 규제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이 가격(원), 가로축이 수량(개)임을 확인한다.
2.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균형 가격 2,000원과 균형 거래량 600개를 읽는다.
3.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구분한다.
4. 대체재 가격과 선호도 변화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고, 가격 상한제는 규제 가격과 균형 가격의 높이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핵심 근거

그래프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가격 2,000원, 수량 600개에서 교차한다. 따라서 2,000원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2,00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또한 대체재 가격 상승이나 해당 상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은 해당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그래프의 교차점이 가격 2,000원, 수량 600개이므로 균형 가격은 2,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600개이다.
② O — 가격 3,000원은 균형 가격 2,000원보다 높다. 그래프에서 이 가격의 공급량은 수요량보다 많으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남은 상품을 팔기 위한 가격 인하 압력이 생긴다.
③ X —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 상품을 대신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 수요가 증가하며, 공급이 그대로라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④ O — 공급 요인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⑤ O — 1,000원은 균형 가격 2,000원보다 낮다. 가격 상한을 1,000원 이하로 정하면 그래프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대체재 가격 상승을 해당 상품의 가격 상승처럼 잘못 연결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이 상품이 저렴해져 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 자체의 오른쪽 이동이고, ‘수요량 증가’는 해당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곡선 위의 이동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확인한다.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초과 공급, 낮으면 초과 수요로 판단한다. 수요 변화 요인이 제시되면 수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정한 뒤, 공급이 고정된 경우 수요 증가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함께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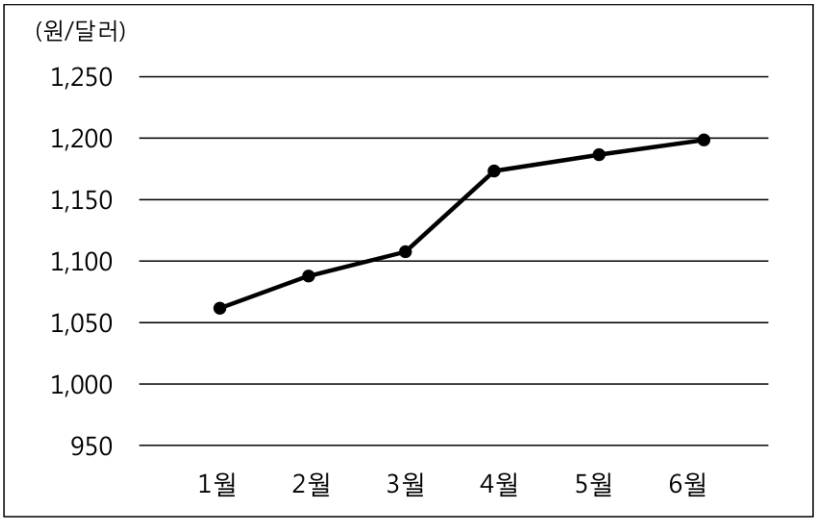
NoteBase

암기 포인트

균형보다 높은 가격은 초과 공급, 낮은 가격은 초과 수요이며, 대체재 가격 상승은 해당 상품의 수요 증가이다.

NoteBase

2. 다음과 같이 환율이 변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국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ㄴ.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
ㄷ. 수출과 관련된 업체의 채산성은 좋아질 것이다.
ㄹ.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원화 가치, 수입 가격, 해외여행 비용,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의 단위가 원/달러임을 확인한다.
2. 환율이 1월 약 1,060원에서 6월 약 1,200원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한다.
3.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늘었으므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고 해석한다.
4. 이를 수입 물가·해외여행·수출 기업에 각각 적용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그래프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상승한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뜻한다. 이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수입품 가격과 해외여행 비용은 오르는 반면,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과 수출 대금의 원화 환산액은 커져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환율 상승으로 해외여행 비용이 늘어나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 여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② O — ㄱ과 ㄷ이 모두 맞다. 수입품의 원화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상승과 수출 대금의 원화 환산액 증가로 채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
③ X — ㄴ은 틀리고 ㄷ은 맞다. 환율 상승 시 외국 여행 비용이 커지므로 외국 여행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④ X —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외국 여행 비용과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오르므로 외국 여행과 수입품 소비는 모두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⑤ X — ㄷ은 맞지만 ㄹ은 틀리다.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품 소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원/달러 환율 상승을 원화 가치 상승으로 거꾸로 해석하기 쉽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1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이때 해외여행과 수입품 소비는 비용 상승으로 줄어드는 방향이고,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일반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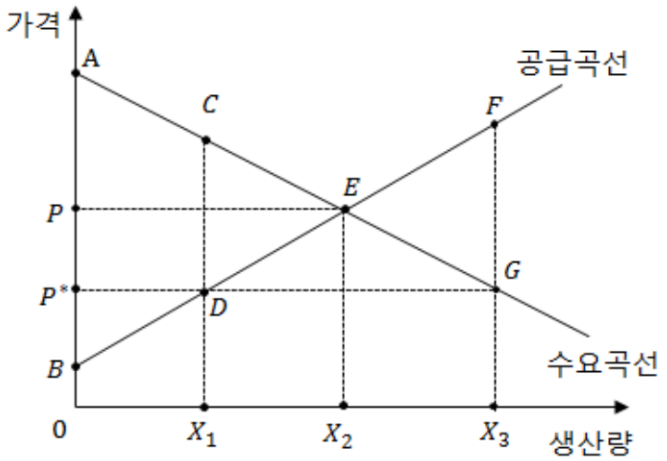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먼저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으로 바꿔 읽는다. 그다음 달러를 사야 하는 수입·해외여행에는 불리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약세이므로 수입·해외여행에는 불리하고 수출에는 유리하다.

NoteBase

3. 그림은 갑국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와 자유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시장의 균형점은 E이다. 이 재화의 국제시장 가격은 P^*이다. 이 국가가 자유무역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국의 수출량은 $(X_3 - X_1)$이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P^*DCA가 된다.
③ 생산자 잉여는 DGF가 된다.
④ 무역의 이익은 DGE만큼 발생한다.
⑤ 소비자, 생산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자중손실이 EGF만큼 발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 가격 P^*가 국내 균형가격 P보다 낮을 때 자유무역으로 생기는 수입량과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그래프의 점과 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자유무역 전에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E에서 가격 P, 거래량 X_2가 결정된다.
2. 자유무역 후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 P^*로 하락하고, 국내 생산량은 X_1, 국내 소비량은 X_3이 된다.
3.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는 수입으로 충당되며, 순후생 증가는 수요곡선·공급곡선·국제 가격선 사이의 삼각형 DGE이다.

핵심 근거

자유무역 후 국내 소비량은 X_3, 국내 생산량은 X_1이므로 수입량은 $X_3 - X_1$이다.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잉여는 늘고 생산자 잉여는 줄지만,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삼각형 DGE만큼 크므로 이것이 무역의 순이익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국제 가격 P^*에서 수요량 X_3이 공급량 X_1보다 크므로 $X_3 - X_1$은 수출량이 아니라 수입량이다. 틀린 표현 '수출량'은 '수입량'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자유무역 후 소비자 잉여는 가격선 P^*G 위이면서 수요곡선 아래인 삼각형 P^*GA이다. P^*DCA는 X_1 이후의 소비자 잉여를 빠뜨린 면적이므로, 'P^*DCA'를 'P^*GA'로 고쳐야 한다.
③ X — 자유무역 후 생산자 잉여는 가격선 P^*D 아래이면서 공급곡선 위인 삼각형 P^*DB이다. 따라서 'DGF'를 'P^*DB'로 고쳐야 한다.
④ O — 소비자 잉여 증가분에서 생산자 잉여 감소분을 빼면 수요곡선 EG, 공급곡선 ED, 국제 가격선 DG로 둘러싸인 삼각형 DGE가 남는다. 이 면적이 자유무역으로 생기는 순후생 증가, 즉 무역의 이익이다.
⑤ X — 자유무역은 국제 가격 P^*에서 부족한 국내 공급을 수입으로 보충하므로 삼각형 EGF가 보상되지 않는 자중손실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중손실이 EGF만큼 발생한다'는 표현은 '순후생이 DGE만큼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국내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곧바로 수출량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제 가격이 국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국내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지므로 수입이 발생한다. 또한 잉여는 면적의 꼭짓점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자유무역의 순이익과 자중손실을 반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 가격이 국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수입국이 된다. 국제 가격선에서 왼쪽 공급곡선과 만나는 수량이 국내 생산량, 오른쪽 수요곡선과 만나는 수량이 국내 소비량이며, 두 수량의 차이가 수입량이다. 자유무역의 순이익은 국제 가격선과 수요·공급곡선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 가격 하락 → 수입 증가 → 소비자 잉여 증가·생산자 잉여 감소 → 순이익은 DGE이다.

NoteBase

4. 다음과 같은 한국은행의 경제조치로 발생할 경제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1.75~2.00%로 인상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단, 다른 경제상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보 기>

ㄱ.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은 감소할 것이다.
ㄴ.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ㄷ. 외환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증가할 것이다.
ㄹ. 은행은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대출, 통화량, 물가, 국제 자본 이동,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금리 상승을 유도하여 대출과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고, 통화량과 물가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는 긴축 통화 정책이다. 또한 국내 금리 상승은 원화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을 높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모두 상승할 수 있지만, 어느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는지는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이 모두 옳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를 높여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감소시키고, 통화량과 총수요를 줄여 물가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외환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증가할 것이다'이다. 올바르게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을 높여 자본 유출을 억제하거나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통화량 감소는 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지만, 국내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본 유출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이다. 올바르게는 기준금리 인상 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대체로 함께 상승하지만 두 금리의 인상 폭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단정할 수 없다.
⑤ X —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국내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의 인상 폭보다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포인트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와 그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를 혼동하기 쉽다. 미국의 금리 인상만 보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지만,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현상을 묻는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금·대출 금리를 모두 끌어올린다는 사실과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단정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금리 인상 문제에서는 '시중 금리 상승 → 대출·소비·투자 감소 → 통화량·총수요 감소 → 물가 하락'의 순서로 판단한다. 국제 자본 이동은 국내 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 자산의 수익률을 높인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상대적 인상 폭은 추가 정보가 없으면 단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금리 인상은 대출·통화량·물가를 낮추는 긴축 방향이며, 국내 금리 상승은 자본 유출을 억제한다.

NoteBase

5.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옷감 1마와 포도주 1병을 생산하는 단위당 노동력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옷감	포도주
갑국	100명	120명
을국	90명	80명

① 갑국은 옷감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② 갑국은 포도주 생산을 특화해야 한다.
③ 갑국에서 포도주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감 $\frac{5}{6}$마이다.
④ 을국에서 옷감 1마의 국내가격은 포도주 $\frac{8}{9}$병이다.
⑤ 양국간 옷감 1마의 교역조건은 포도주 $\frac{5}{6}$병에서 $\frac{9}{8}$병 사이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단위당 노동량으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구분하고, 각국의 옷감 1마 생산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역조건의 범위를 찾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국의 단위당 노동량은 옷감 100명, 포도주 120명이고, 을국은 옷감 90명, 포도주 80명이다.
단위당 노동량이 더 적은 나라가 절대우위를 가진다. 비교우위는 같은 재화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 즉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가 가진다.

사용할 공식

재화 X 1단위의 기회비용=X의 단위당 노동량Y의 단위당 노동량 단위의 Y
노동량이 일정할 때 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한 노동으로 다른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구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갑국에서 옷감 1마의 기회비용은 100/120 = 5/6병의 포도주이고, 포도주 1병의 기회비용은 120/100 = 6/5마의 옷감이다.
을국에서 옷감 1마의 기회비용은 90/80 = 9/8병의 포도주이고, 포도주 1병의 기회비용은 80/90 = 8/9마의 옷감이다.
따라서 갑국은 옷감, 을국은 포도주에 비교우위가 있다. 옷감 1마의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인 포도주 5/6병 초과 9/8병 미만이어야 양국 모두 교역 이익을 얻는다.

선지 판단

① X — 옷감 1마에 필요한 노동량은 갑국 100명, 을국 90명이므로 옷감의 절대우위는 을국에 있다. 틀린 표현 '갑국은 옷감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는 '을국은 옷감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갑국은 옷감 1마의 기회비용이 5/6병으로 을국의 9/8병보다 작으므로 옷감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갑국은 포도주가 아니라 옷감 생산을 특화해야 한다.
③ X — 갑국에서 포도주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감 120/100 = 6/5마이다. 선지의 5/6은 옷감 1마 생산의 기회비용이므로, '옷감 5/6마'는 '옷감 6/5마'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을국에서 옷감 1마의 국내가격은 그 기회비용인 포도주 90/80 = 9/8병이다. 선지의 8/9병은 포도주 1병의 기회비용이므로, '포도주 8/9병'은 '포도주 9/8병'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갑국과 을국에서 옷감 1마의 기회비용은 각각 포도주 5/6병과 9/8병이다. 따라서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옷감 1마의 교역조건은 그 사이에 형성된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분자와 분모를 뒤집어 서로 다른 재화의 기회비용을 혼동하게 만든다. '옷감 1마'를 기준으로 물으면 옷감 노동량을 포도주 노동량으로 나누고, '포도주 1병'을 기준으로 물으면 포도주 노동량을 옷감 노동량으로 나눈다. 또한 절대우위는 노동량의 크기로,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의 크기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위당 노동량이 적은 나라를 찾아 절대우위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을 나라별로 계산하여 더 작은 나라의 비교우위를 정한다. 교역조건은 수출재 1단위의 두 나라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더 적은 노동량, 비교우위는 더 작은 기회비용이다. 교역조건은 두 나라 기회비용의 사이이다.

NoteBase

6.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지역주의는 세계화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역적인 차원에서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유럽연합(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등이 대표적인 지역주의 경제 협력체이다.

<보 기>

ㄱ. 협상을 통한 국내 취약산업의 보호
ㄴ. 회원국 간 자유무역의 혜택을 비회원국으로 확대
ㄷ. 역내 국가 간 자유무역을 통한 회원국들의 이익 증대
ㄹ. 더 큰 경제 단위로서 국제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지역주의에 따른 경제 협력체가 회원국에 주는 효과와 그 혜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이 경제 협력체를 형성하여 역내 교역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흐름이다.
역내 자유무역의 직접적인 혜택은 회원국 사이에서 발생하며, 회원국은 교역 확대에 따른 이익을 얻고 더 큰 경제 단위로서 역외 국가와의 통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ㄷ과 ㄹ은 옳고, ㄱ과 ㄴ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모두 옳지 않다. 지역주의의 핵심은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므로 국내 취약 산업 보호가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유무역의 혜택도 비회원국이 아니라 회원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 ㄷ은 옳지만 ㄱ이 옳지 않다. '협상을 통한 국내 취약 산업의 보호'는 역내 자유무역 확대라는 지역 경제 협력의 일반적 효과와 맞지 않는다. ㄱ을 ㄹ로 바꾸면 ㄷ, ㄹ의 올바른 조합이 된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이 옳지 않다. 역내 자유무역의 혜택은 비회원국이 아니라 회원국 사이에서 우선 확대된다. ㄴ을 ㄹ로 바꾸면 ㄷ, ㄹ의 올바른 조합이 된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ㄴ이 옳지 않다. 비회원국은 역내 관세 인하 등 회원국 간 특혜를 동일하게 누리지 못한다. ㄴ을 ㄷ으로 바꾸면 ㄷ, ㄹ의 올바른 조합이 된다.
⑤ O — ㄷ과 ㄹ이 모두 옳다. 회원국 간 자유무역은 역내 교역을 늘려 회원국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고, 여러 국가가 하나의 더 큰 경제 단위로 협상하면 국제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ㄴ의 '비회원국으로 확대'가 핵심 함정이다. 지역 경제 협력체의 자유무역 혜택은 우선 회원국 사이에 적용되며, 비회원국에는 역외 장벽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ㄱ의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지역주의의 일반적 효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 경제 협력체의 효과는 '역내에서는 장벽 완화와 교역 확대,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과 협상력 강화'로 구분한다. 혜택의 대상을 묻는 표현에서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역주의는 역내 교역 확대, 회원국 이익 증대, 대외 협상력 강화로 기억한다.

NoteBase

7. 다음 표에 제시된 인플레이션의 유형과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형	현 상	대 책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 증가 → 물가 상승	(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총공급 감소 → 물가 상승	(나)

	(가)	(나)
①	긴축 통화 정책	금리 인상 정책
②	긴축 통화 정책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
③	금리 인상 정책	임금 인상 정책
④	금리 인하 정책	임금 인상 정책
⑤	금리 인하 정책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을 구별하고, 각 원인을 직접 완화하는 대책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긴축 통화 정책이나 금리 인상으로 총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적절하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임금·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 상승으로 총공급이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생산성 향상 지원처럼 생산비 부담을 낮추거나 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이 적절하다.
핵심 대비는 수요 견인은 총수요 억제, 비용 인상은 생산비 완화·총공급 확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긴축 통화 정책은 총수요를 줄이므로 적절하지만, (나)의 금리 인상 정책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총공급 감소의 원인을 직접 해소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금리 인상 정책'이며, 올바르게는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이다.
② O — 긴축 통화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은 생산비를 낮추고 총공급을 늘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
③ X — (가)의 금리 인상 정책은 총수요를 줄이므로 적절하지만, (나)의 임금 인상 정책은 생산비를 높여 총공급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임금 인상 정책'이며, 올바르게는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이다.
④ X — (가)의 금리 인하 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므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고, (나)의 임금 인상 정책도 생산비를 높일 수 있다. '금리 인하 정책'은 '긴축 통화 정책 또는 금리 인상 정책'으로, '임금 인상 정책'은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나)의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은 적절하지만, (가)의 금리 인하 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틀린 표현은 '금리 인하 정책'이며, 올바르게는 '긴축 통화 정책 또는 금리 인상 정책'이다.

오답 포인트

긴축 통화 정책과 금리 인상 정책은 모두 총수요를 억제하므로 (가)에 적절하다. 그러나 표는 각 유형의 원인에 맞는 대책 조합을 요구하므로, (나)에는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총공급을 회복시키는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을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가 상승의 원인이 총수요 증가인지 총공급 감소인지 확인한다. 총수요 증가이면 금리 인상·긴축 통화처럼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총공급 감소이면 생산성 향상·생산비 완화처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수요 견인에는 수요 억제, 비용 인상에는 비용 완화·공급 확대이다.

NoteBase

8.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가 추진된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해 처음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이어 2번째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대학입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 데일리한국 2018. 4. 16

①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③ 공론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제고한다.
④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한다.
⑤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행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성은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론화가 숙의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특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론화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토론·숙고하여 공공 문제에 관한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시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식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시민의 의견을 아래에서 위로 수렴하는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② O — 시민이 공공 문제를 토론하고 숙고하는 과정에 참여하므로 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③ O — 시민의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면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이다. 공론화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속성 제고가 주된 목적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한다'이다.
⑤ O —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정책 판단에 활용되는 의견이며, 그 자체가 행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정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론화가 정책 문제의 해법을 찾는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정책 결정을 빠르게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④의 '신속성'은 충분한 정보 제공, 토론, 숙고에 시간이 걸리는 공론화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론화 관련 선지는 '시민 참여·숙의·상향식 의견 수렴·정당성·수용성'이면 타당한 특징으로 판단한다. '신속한 결정'이나 '수렴된 의견의 자동적 법적 구속'처럼 숙의 과정의 성격을 벗어난 표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론화는 빠른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를 통한 정당성과 수용성의 제고이다.

NoteBase

9. 국회의 권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국회는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률을 최대 38%까지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투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 (나) 국회는 인사 청문회 이후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① (가)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이다.
② (가)의 법률안은 행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
③ (나)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④ (나)는 국회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다.
⑤ (가)는 입법에 관한 권한이고, (나)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의 권한을 입법, 일반 국정 및 국가기관 구성, 국정 통제의 권한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대법원장 임명동의권과 국정감사·국정조사권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임명동의권 = 대통령이 특정 국가기관의 장 등을 임명할 때 국회가 그 임명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다.

핵심 구분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가)는 국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나)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임명동의권이며, 넓게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으로 분류된다. 반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표적 권한은 국정감사·국정조사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 권한이다.

② O
-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므로, (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행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

③ X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나)는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지,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같은 국정 감시·통제 권한이 아니다.
- 틀린 표현: (나)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 올바른 표현: (나)는 국회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임명동의권이며, 넓게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④ O
-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는 것은 대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는 권한이다.

⑤ O
- (가)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입법 권한이고, (나)는 넓은 분류에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나)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인사 청문회'라는 표현 때문에 국회를 통한 행정부·국가기관 통제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답을 가르는 행위는 청문회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이며, 이는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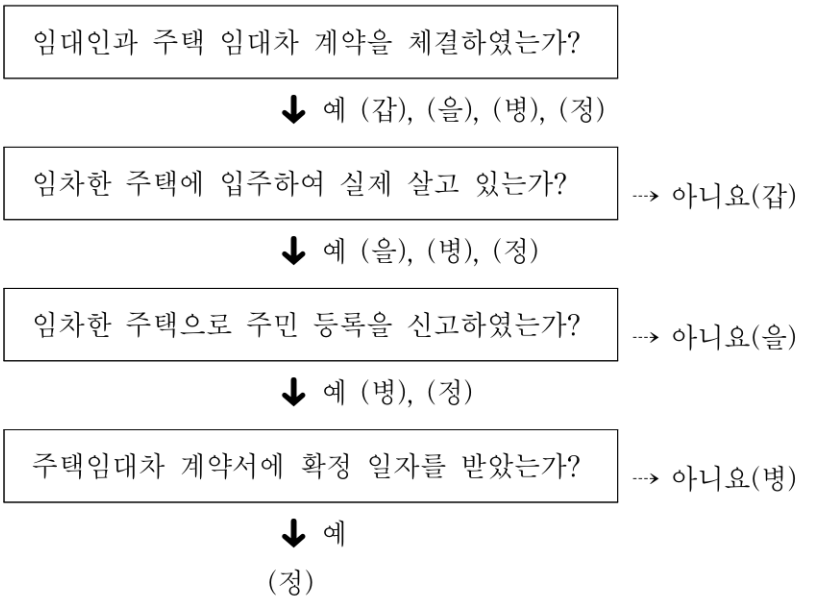
국회의 권한은 구체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안 심의·의결은 입법, 예산·결산과 조세는 재정, 임명동의는 국가기관 구성 또는 일반 국정, 국정감사·국정조사와 탄핵소추는 국정 통제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법률안은 입법, 임명동의는 기관 구성, 감사·조사는 국정 통제이다.

NoteBase

10. 다음 표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세 입자 (갑)~(정)의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갑)은 실제 입주하지 않았으므로 임차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이 없다.

ㄴ. (을)은 임대차 기간 1년 동안만 임차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ㄷ. (병)은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ㄹ. (정)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주택 임차인의 계약상 권리·의무, 임대차의 보호기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각각 어떤 법적 효과를 만드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등 제삼자에게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NoteBase

핵심 구분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 입주 전에도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등기 없이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약정한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더하여 갖춘다. 따라서 갑의 ㄱ과 을의 ㄴ은 틀리고, 병의 ㄷ과 정의 ㄹ은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모두 옳지 않다. 갑은 실제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로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을은 1년으로 약정했더라도 원칙적으로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ㄱ, ㄴ
- 올바른 표현: 옳은 설명은 ㄷ, ㄹ이다.

② X
- ㄱ은 틀리고 ㄹ은 옳다. 갑에게 대항력이 아직 없다는 것과 계약상 권리·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르다. 정은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틀린 표현: ㄱ
- 올바른 표현: 옳은 설명은 ㄷ, ㄹ이다.

③ X
-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을의 1년 약정은 임차인이 원하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1년만을 강제할 수는 없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 보호받는다. 병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ㄴ
- 올바른 표현: 옳은 설명은 ㄷ, ㄹ이다.

④ X
-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을은 임대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틀린 표현: ㄴ
- 올바른 표현: 옳은 설명은 ㄷ, ㄹ이다.

⑤ O
- ㄷ과 ㄹ이 모두 옳다. 병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었고, 정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우선변제권도 갖추었다.

오답 포인트

갑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계약상 권리·의무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ㄱ을 잘못 고르게 된다. 또한 1년 약정이 언제나 임차인을 1년으로 구속한다고 생각하면 ㄴ을 놓친다. 대항력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차이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약 체결 여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효력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는지 보아 대항력을 판단하고, 확정일자까지 있는지 보아 우선변제권을 판단한다.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2년까지 보호받는다는 점을 함께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계약은 합의로 효력, 인도＋주민등록은 대항력,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다. 2년 미만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에게 2년 보호가 원칙이다.

NoteBase

1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발생된다.

ㄷ.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ㄹ. 2018. 7.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1주간 근로시간을 50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해고 통지의 방식과 효력, 임금 지급 원칙, 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묻는다. 핵심은 서면통지와 구두통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통지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없다.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이며, 제53조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간 상한은 52시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만 알리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조합: ㄱ, ㄴ
올바른 조합: ㄱ, ㄷ

② O
ㄱ과 ㄷ이 모두 옳다.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X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2018년 7월 1일부터 해당 규모의 사업장 등에 적용된 주간 근로시간 기준은 법정근로 40시간과 합의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지 50시간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ㄱ, ㄹ
올바른 조합: ㄱ, ㄷ

④ X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조합: ㄴ, ㄷ
올바른 조합: ㄱ, ㄷ

⑤ X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50시간을 절대적 상한으로 제시한 표현이 잘못되었다.
틀린 조합: ㄷ, ㄹ
올바른 조합: ㄱ, ㄷ

오답 포인트

ㄴ의 ‘구두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와 ㄹ의 ‘50시간’이 함정이다. 해고는 서면통지가 효력요건이고, 주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합의 연장근로 12시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고 문제에서는 먼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임금 문제에서는 통화·직접·전액·월 1회 이상·일정한 날짜의 원칙을 확인한다. 근로시간 문제에서는 법정근로 40시간과 합의 연장근로 12시간을 나누어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해고 효력은 서면통지, 임금은 통화·직접·전액·정기, 주간 근로는 40+12=52이다.

NoteBase

12. 다음 (ㄱ)과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드라마는 직장 내 성희롱, 내부고발자의 해고무효소송 등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ㄱ) 재판 장면에서는 사건 너머의 사람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통찰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공감을 자아냈다. 반면, (ㄴ) 재판 장면에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와 범법을 저지른 피고인이 수의를 입고 수갑까지 찬 채로 법정에 등장하면서 더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① (ㄱ)는 기본적으로 '자력 구제의 원칙'을 따른다.
② (ㄱ)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ㄴ)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개시된다.
④ (ㄴ)는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⑤ (ㄱ)와 (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상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ㄱ) 민사재판과 (ㄴ) 형사재판의 시작 방식,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형사 절차의 순서, 상소의 명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민사재판 = 개인 사이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형사재판 =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벌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상고 =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민사재판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하고,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시작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므로 민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이다.

올바른 순서

형사 절차의 기본 흐름은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증거를 조사한 뒤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공판에서 심리한 다음 판결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민사재판이다. 민사상 권리 분쟁은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력구제는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틀린 표현: '자력 구제의 원칙을 따른다' →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제한되고 국가의 재판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한다'이다.
② X —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므로 (ㄱ) 민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틀린 표현: '(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이 정한 형사사건에서 진행할 수 있다'이다.
③ X — (ㄴ)은 형사재판이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시작하는 것은 민사소송이다. 틀린 표현: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개시된다' → 올바른 표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이다.
④ O —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 검사의 기소, 법원의 공판, 판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앞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을 공판에서 심리한 뒤 판결한다.
⑤ X — (ㄱ)과 (ㄴ)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의 일반적인 상소는 상고가 아니라 항소이다. 틀린 표현: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상고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상고'를 상소의 일반 명칭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아우르는 말이며, 심급에 따라 제1심 판결에는 항소, 제2심 판결에는 상고가 원칙이다. 또한 민사재판의 원고·소장과 형사재판의 검사·기소를 서로 바꾸어 이해하면 ②와 ③을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개인 간 권리 분쟁이면 민사재판, 범죄와 형벌 판단이면 형사재판으로 구분한다. 그다음 시작 주체를 '민사: 원고의 소장 제출, 형사: 검사의 기소'로 대응시키고, 불복 절차는 '1심→항소, 2심→상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민사는 원고·소장, 형사는 검사·기소·공판, 1심 불복은 항소·2심 불복은 상고이다.

NoteBase

13. 다음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자연 상태에서는 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했습니다.
>
> (나)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권력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일, 국가가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
> (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던 인간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며, 주권은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습니다.

① (가)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가 되었다.
② (가)는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③ (나)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가장 관련된다.
④ (다)는 대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사회계약설의 대표적 주장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설을 자연 상태, 계약의 목적, 주권의 성격, 바람직한 정치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홉스: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개인이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양도한다고 본다. 강력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
(나) 로크: 자연권인 생명·자유·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정부를 구성한다고 본다.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할 수 있으며, 제한 정부와 권력 분립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다) 루소: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보고, 사회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따른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으므로 직접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홉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질서와 안전을 위한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였다. 틀린 표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이며, 올바르게는 '절대주권론 또는 강력한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기초'이다.
② O — 홉스는 자연 상태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강력하고 절대적인 주권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므로, 그의 논리는 독재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③ O — (나)의 로크는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할 때 저항권을 인정하고 권력의 제한과 분립을 중시하므로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가장 관련된다.
④ O — (다)의 루소는 주권이 인민에게 있으며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대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다.
⑤ O — (가) 홉스, (나) 로크, (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설명한 사회계약설의 대표적 사상가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홉스도 사회계약론자라는 점을 이용해 그의 사상을 민주주의의 기초로 오인하게 만든다. 사회계약설이라는 공통점만 보지 않고 계약 뒤의 주권이 절대적인지 제한되는지, 인민이 직접 행사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쟁·권리 양도·절대주권'이면 홉스, '생명·자유·재산·저항권·권력 분립'이면 로크, '자유와 평등·일반 의지·주권의 양도 및 대표 불가·직접 민주주의'이면 루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홉스는 절대주권, 로크는 자연권과 저항권, 루소는 일반 의지와 직접 민주주의이다.

NoteBase

14. 다음 제시문에 나온 국제관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30년 전쟁의 종결 조약으로서 1648년에 체결된 (가)는 유럽에서 최초로 영토의 구분을 전제로 한 근대국가체제의 형성을 가져왔다.

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를 위해 국가들이 (나)의 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ㄷ.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된 (다) 시기는 소련 및 동유럽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약 45년간 존속되었다.

ㄹ. (다) 시기의 해체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환경, 보건, 난민 등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었다.

① (가)로 인해 형성된 국가체제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와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UN)은 성공적으로 창설되었다.
③ (나)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불참이었다.
④ (다) 시기 중 미국과 소련은 데탕트를 경험하기도 했다.
⑤ 1989년 몰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다) 시기가 끝남을 선언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근대 국가체제, 국제 연맹, 냉전의 성립과 해체를 주요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가)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30년 전쟁을 끝내고 주권과 영토를 바탕으로 한 근대 국가체제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된 조약이다.
(나) 국제 연맹: 제1차 세계 대전 뒤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이지만 미국의 불참, 강제력 부족 등으로 침략을 막지 못했다.
(다) 냉전: 제2차 세계 대전 뒤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직접적인 전면전은 피하면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대립한 국제 질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형성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는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의 기본 틀로 존재한다.
② O — 국제 연맹과 달리 국제 연합(UN)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참여 아래 창설되었다.
③ O — 미국은 국제 연맹의 구상을 주도했지만 자국 의회의 반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불참은 국제 연맹의 대표적인 한계이자 실패 원인 중 하나였다.
④ O — 냉전기에도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완화되는 데탕트가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군비 제한 협상과 정상 간 교류가 전개되었다.
⑤ O — 1989년 몰타 회담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냉전 종식을 선언하였다.

오답 포인트

①은 베스트팔렌 체제가 오래전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현재 소멸했다'는 뜻으로 바꾼 선지이다. 또한 ④의 데탕트는 냉전이 끝난 뒤의 현상이 아니라 냉전이 지속되던 중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현상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관계사의 흐름을 '베스트팔렌 조약과 주권 국가체제 형성 → 제1차 세계 대전 뒤 국제 연맹 → 제2차 세계 대전 뒤 국제 연합과 냉전 → 냉전 중 데탕트 → 1989년 몰타 회담의 냉전 종식 선언' 순서로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베스트팔렌은 주권 국가체제, 국제 연맹은 미국 불참, 냉전 중에는 데탕트, 1989년 몰타 회담은 냉전 종식 선언으로 연결한다.

NoteBase

15. 다음은 갑과 을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00프로야구단 감독이 성적부진의 이유로 전격 경질되었고, 후임 감독으로 유명한 00씨가 유력하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
> 을: 감독 한 명 바뀐다고 팀이 달라지지 않아!
>
> 갑: 실력 있는 감독으로 교체되면 팀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
> 을: 개인을 넘어 조직 또는 팀 전체의 조직력이 중요하지!

① 갑은 개인이 사회의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② 을은 사회유기체설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③ 갑은 을보다 사회의 외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④ 을은 개인행동의 구조화는 사회규범의 구속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⑤ 갑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이라고 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를 보는 사회 명목론과 사회 전체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 명목론: 사회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이며, 사회 현상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중시한다.
사회 실재론: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실체이며, 사회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본다. 사회의 외재성과 구속성을 중시한다.
갑은 감독 개인의 능력이 팀 전체의 성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므로 사회 명목론, 을은 개인보다 조직 전체의 조직력을 중시하므로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갑은 개인을 사회에 종속된 단순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자율적·능동적 존재로 보므로 옳다.
② O — 을은 사회 전체가 개인의 단순한 합을 넘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므로,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사회유기체설의 관점과 통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갑은 을보다 사회의 외재성을 중시한다'이다.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외재성은 사회 실재론인 을이 갑보다 더 중시한다.
④ O — 을의 관점에서 개인 행동의 구조화는 사회 규범과 제도가 개인의 행동 방향과 범위를 정하고 제약하는 구속성을 뜻하므로 옳다.
⑤ O — 갑은 사회를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외재성의 주체를 뒤바꾼 선지이다. 개인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갑이 아니라,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을이 사회의 외재성을 중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의 능력·자율성·행동이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 사회 명목론으로, 사회 구조·제도·규범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하면 사회 실재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론은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을 제약한다'로 구분한다.

NoteBase

16.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대한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이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 (나) 이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①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② (가)보다 (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가)는 (나)에 비해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나)는 (가)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대상 범위, 소득 재분배 효과, 보장 방식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사회보험: 질병·장애·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나) 공공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조세를 재원으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므로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편적·보험 방식의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을 선별하여 돕는 조세 방식의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이다.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므로 올바르게는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이다.
② O —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므로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는 (나)에 비해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는 빈곤이 발생한 뒤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가)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나)는 (가)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므로, 금전적 지원은 두 제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서로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또한 ⑤는 공공부조의 금전적 지원을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처럼 표현했지만, 두 제도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의무 가입·국민 전체·사전 대비'가 보이면 사회보험으로, '조세·선별 지원·최저 생활·사후 구제·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보이면 공공부조로 판단한다. 지원 형태를 묻는 경우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미리 대비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로 빈곤을 사후 지원한다.

NoteBase

17. 다음 자료에 드러난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소득은 월평균 476만 29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 그러나 소득분배수준을 보면,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 월평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상류층 5분위 가구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소득불균형 심화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더 주된 요인이다.

<보 기>

ㄱ.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
ㄴ. 사회 불평등은 부당하고 해소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
ㄷ.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ㄹ. 사회적 희소 자원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이 사회 불평등을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에서 설명하는지 파악하고, 각 관점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론: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유능한 사람을 배치하기 위한 차등 보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분배 기준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기초한다고 본다.
갈등론: 사회 불평등은 지배 집단이 권력과 가정 배경 등을 이용해 희소 자원을 차등 분배하면서 생기는 부당한 현상이므로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제시문은 소득 불균형의 주된 원인을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찾으므로 갈등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ㄴ과 ㄹ이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기능론의 설명이고 ㄴ은 갈등론의 설명이므로 두 진술을 함께 고를 수 없다. 틀린 조합 'ㄱ, ㄴ'은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과 ㄷ은 모두 기능론의 설명이므로 갈등론에 해당하는 제시문과 맞지 않는다. 틀린 조합 'ㄱ, ㄷ'은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ㄴ은 갈등론의 설명이지만 ㄷ은 분배 기준이 사회 전체의 합의에 따른다고 보는 기능론의 설명이다. 틀린 조합 'ㄴ, ㄷ'은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④ O — ㄴ은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소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갈등론의 설명이고, ㄹ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따른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를 강조하는 갈등론의 설명이다. 두 진술 모두 제시문의 관점과 일치한다.
⑤ X — ㄹ은 갈등론의 설명이지만 ㄷ은 사회 전체의 합의에 따른 분배 기준을 강조하는 기능론의 설명이다. 틀린 조합 'ㄷ, ㄹ'은 'ㄴ, 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내용이 있다고 해서 기능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의 핵심은 '개인적 요인보다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주된 요인'이라는 문장이다. 또한 ㄷ의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는 기능론, ㄹ의 '가정 배경이나 권력'은 갈등론을 가르는 대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 불평등을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차등 보상, 사회적 합의, 보편성과 불가피성으로 설명하면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권력과 배경에 따른 강제적 분배, 지배 집단의 이익, 부당성과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합의·기능·불가피, 갈등론은 권력·강제·해소이다.

NoteBase

18.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이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면접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고 보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배경으로 한다.

<보 기>

ㄱ.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ㄴ.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ㄷ.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ㄹ. 관찰이 곤란한 인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심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양적 연구 방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질적 연구는 관찰이나 면접 등으로 수집한 비수치 자료를 연구자가 해석하여 인간 행위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직관적 통찰, 감정 이입적 이해, 동기와 목적의 파악이다.
양적 연구는 수치화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변수 간 관계를 밝히고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려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인과 관계, 보편적 법칙, 일반화이다.
방법론적 이원론은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의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모두 질적 연구의 특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인과 관계를 설명'과 '보편적 법칙을 발견'은 질적 연구가 아니라 주로 양적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올바르게는 질적 연구는 행위의 의미와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② X — ㄱ은 틀리고 ㄷ은 맞으므로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인과 관계를 설명'은 주로 양적 연구의 특징이며,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③ X — ㄴ은 틀리고 ㄷ은 맞으므로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보편적 법칙을 발견'은 주로 양적 연구의 목적이며, 질적 연구는 개별 사례의 맥락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 한다.
④ X — ㄴ은 틀리고 ㄹ은 맞으므로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보편적 법칙을 발견'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질적 연구가 관찰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심을 가진다.
⑤ O — ㄷ과 ㄹ은 모두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하고,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려 한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관찰이나 면접'만 보고 경험적 자료를 다루는 모든 연구의 공통점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이 결정적 단서이다. 인과 관계와 보편적 법칙은 양적 연구 쪽이고, 직관·공감·동기·목적은 질적 연구 쪽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치화·통계·인과 관계·일반화가 나오면 양적 연구로, 해석·맥락·직관·감정 이입·행위 동기가 나오면 질적 연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양적 연구는 인과와 일반화, 질적 연구는 해석과 공감이다.

NoteBase

19. 다음 표는 사회 계층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07년과 2017년 응답자 동일)

(단위: %)

		2007년 계층 분포		
		상층	중층	하층
2017년 계층분포	상층	7	3	2
	중층	5	30	6
	하층	12	12	23

① 부분 불평등형에서 부분 평등형으로 변화하였다.

② 2007년 대비 2017년에 계층하강이 상승보다 더 많다.

③ 2007년 대비 2017년 계층 구성비의 변화 폭이 중층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④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할 때 계층이 변화하지 않은 사람은 과반수가 넘는다.

⑤ 다이아몬드형 계층에서 피라미드형 계층으로 변화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행의 2017년 계층과 열의 2007년 계층을 구분하고, 행·열 합계로 각 연도의 계층 구성비를 구한 뒤 대각선 안팎의 값으로 계층 이동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이고 2007년과 2017년의 응답자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확인한다.
2. 열 합계로 2007년 계층 구성비를 구하면 상층 24%, 중층 45%, 하층 31%이다.
3. 행 합계로 2017년 계층 구성비를 구하면 상층 12%, 중층 41%, 하층 47%이다.
4. 대각선은 계층 유지, 대각선의 오른쪽 위 방향은 상승 이동, 왼쪽 아래 방향은 하강 이동으로 구분한다.

핵심 근거

2007년에는 중층 45%가 가장 많아 다이아몬드형인 부분 평등형이고, 2017년에는 하층 47%, 중층 41%, 상층 12%의 순이므로 피라미드형인 부분 불평등형이다. 따라서 ①은 변화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선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007년은 중층 45%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즉 부분 평등형이고 2017년은 하층 47%가 가장 많은 피라미드형, 즉 부분 불평등형이다. '부분 불평등형에서 부분 평등형으로'가 아니라 '부분 평등형에서 부분 불평등형으로 변화하였다'가 옳다.
② O — 행은 2017년, 열은 2007년이다. 상승 이동은 2007년 중층→2017년 상층 3%, 하층→상층 2%, 하층→중층 6%로 합계 11%이다. 하강 이동은 상층→중층 5%, 상층→하층 12%, 중층→하층 12%로 합계 29%이므로 하강이 상승보다 많다.
③ O — 2007년과 2017년의 구성비 변화 폭은 상층 12%p(24%→12%), 중층 4%p(45%→41%), 하층 16%p(31%→47%)이다. 중층의 변화 폭이 가장 작다.
④ O — 계층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대각선의 7%+30%+23%=60%이다. 60%는 과반수이다.
⑤ O — 2007년은 중층 비율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형이고, 2017년은 하층에서 중층·상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피라미드형이다. 따라서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였다.

오답 포인트

표의 행과 열을 반대로 읽으면 상승·하강 이동의 합계가 뒤바뀐다. 또한 각 연도의 계층 분포는 개별 칸 하나가 아니라 2007년은 열 합계, 2017년은 행 합계로 판단해야 한다. ①은 다이아몬드형과 피라미드형의 평등 정도를 정반대로 연결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행과 열이 각각 어느 시점인지 표시한다. 각 시점의 계층 구성은 해당 행 또는 열의 합계로 구하고, 동일 응답자의 이동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유지·상승·하강을 나누어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중층이 가장 두꺼우면 다이아몬드형·부분 평등형, 하층이 가장 두껍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면 피라미드형·부분 불평등형이다.

NoteBase

20. (가)와 (나)의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가)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육아는 일차적으로 엄마나 확대가족 구성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 역할 의식이 강하고, '육아의 사회화'라는 관념이 적으며 정부 또한 육아정책에 소극적이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육아는 사적 · 공적 영역의 공동 의무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육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유럽 여러 나라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

	1980		2005	
	노동시장 참여율[1]	합계 출산율[2]	노동시장 참여율[1]	합계 출산율[2]
그리스	40.1	2.21	54.6	1.34
노르웨이	61.8	1.72	74.5	1.84
덴마크	71.7	1.55	75.8	1.80
스웨덴	75.0	1.68	76.4	1.77
스페인	33.1	2.22	58.2	1.35
이탈리아	39.7	1.68	50.4	1.32
포르투갈	52.5	2.18	67.8	1.41
핀란드	68.9	1.63	72.7	1.80

주[1] 15~64세 여성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
[2]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

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합계출산율은 낮다.
② 이들 국가는 1980년보다 2005년에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③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남유럽 국가의 여성들보다 북유럽 국가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율이 빠르다.
④ 적극적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한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증가해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⑤ 전통적 성 역할 의식이 강한 남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은 관계가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남유럽과 북유럽 각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을 1980년과 2005년 사이의 변화 방향 및 지역별 양육 정책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각 국가에서 1980년과 2005년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한다.
2.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한다.
3. 남유럽과 북유럽을 나누어 (가)의 양육 정책 차이와 표의 변화 방향을 연결한다.

핵심 근거

북유럽 4개국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합계출산율도 노르웨이 1.72→1.84, 덴마크 1.55→1.80, 스웨덴 1.68→1.77, 핀란드 1.63→1.80으로 모두 상승하였다. 반면 남유럽 4개국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모두 상승했지만 합계출산율은 그리스 2.21→1.34, 스페인 2.22→1.35, 이탈리아 1.68→1.32, 포르투갈 2.18→1.41로 모두 하락하였다. 이는 북유럽의 적극적 육아 지원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출산율 유지를 함께 가능하게 했음을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 2005년 자료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72.7~76.4인 북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1.77~1.84이고, 참여율이 50.4~67.8인 남유럽 국가들은 1.32~1.41이다. 따라서 '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합계출산율은 낮다'는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2005년에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도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다고 해야 한다.
② X — 북유럽 4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보다 2005년에 모두 상승했으므로 이들 국가 모두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남유럽 4개국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북유럽 4개국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상승했다고 해야 한다.
③ X —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상승 폭은 남유럽이 그리스 14.5%포인트, 스페인 25.1%포인트, 이탈리아 10.7%포인트, 포르투갈 15.3%포인트이고, 북유럽은 노르웨이 12.7%포인트, 덴마크 4.1%포인트, 스웨덴 1.4%포인트, 핀란드 3.8%포인트이다. 국가별 상승 폭을 비교하면 남유럽의 증가가 전반적으로 더 빠르다.
④ O — 적극적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한 북유럽 4개국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였다. (가)의 정책 차이와 (나)의 변화 방향이 일치한다.
⑤ X — 남유럽 4개국에서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모두 상승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모두 하락했으므로 두 지표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이 기간 남유럽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1980년의 일부 수치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2005년에는 북유럽이 남유럽보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다. 또한 ②와 ⑤처럼 참여율의 상승만 보고 저출산 심화나 무관계를 단정하면 안 되며, 같은 국가의 두 연도 출산율 변화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시점의 국가별 자료에서는 먼저 각 지표의 변화 방향을 표시한 뒤 지역 집단별 공통 패턴을 찾는다. 그다음 제시문의 정책 차이가 그 패턴을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높을수록', '모두', '관계가 없다'와 같은 강한 표현은 예외가 하나라도 있는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북유럽은 참여율↑·출산율↑, 남유럽은 참여율↑·출산율↓이다.

NoteBase